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9장. 정의와 인류 개발

정보경제에서 창발하는 비시장, 공유재 기반 생산이 어떻게 분배와 인류 복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비관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기아, 질병, 뿌리깊은 인종적 갈등, 민족적 갈등, 사회적 계층화 문제를 탈중심화된 공유재 기반의 정보생산 시스템만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깨끗한 물, 기초 교육, 적절히 기능하는 정부,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이는 인터넷 기반 사회는 가난과 공핍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은 부유한 사회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빈곤국가들과 중간소득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정보경제로의 전환이 정의와 인류 개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전망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역할을 과장하면 안되겠지만, 정보·지식·문화가 인류 후생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농업 지식과 생물학 분야의 혁신은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의학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 문해율과 교육은 개인의 성장, 민주적 자치(self-governance), 경제적 역량의 개선에 필수적이다. 나아가 경제적 성장은 기술혁신과 정보의 이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보정책은 개발 정책(development policy)의 일부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인류 후생(welfare)과 복지(well-being)를 어떻게 달성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지식의 이용(access to knowledge)은 인류 개발의 중심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은 자유를 신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정보경제보다 정의의 규범적 영역(normative domain of justice)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이 정의와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구조적 틀을 통해서 분석해보자. 두 가지 틀은 현저히 다르다. 첫째는 평등한 기회의 분배에 주된 관심을 두는 자유주의적 틀이다. 둘째는 사회민주주의적 틀 또는 개발중심적 틀로서 인류 복지에 필요한 중대한 요소들의 보편적 공급(universal provision)에 초점을 둔다. 비시장적 자원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활용, 그리고 비전유적 생산 환경에서 행동하는 폭넓은 기회의 다양성은 분배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개선효과는 두 개의 틀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나타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이 같은 개선효과는 접근성의 향상으로 구체화된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은 독자적 행동을 펼칠 기회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opportunities)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투입(inputs)과 산출(outputs)을 향상시킨다. 산업경제에는 비용장벽(cost barriers)과 거래제도적 장벽(transactional-institutional barriers) 등이 버티고 있지만,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이 장벽들을 낮추거나, 우회하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 행위주체(economics actor)로 참여하는 기회들을 크게 확장하고 정보기반 글로벌 경제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평준화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제시하는 기회들은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중심적 정책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양대 세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산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밀어 붙였고, 강력한 특허권, 저작권, 배타권 유사 권리들에 의존하는 방식을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핵심적 정보정책으로 선택했다. 혁신의 최적화(optimizing innovation)에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주목하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은 전유권 기반의 정보정책이 가져오는 효과를 의심스럽게 평가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2장에 나타나 있다. 전유적 접근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보생산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부당하기까지 하다. 전유권은 사람들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므로, 시장은 분배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현존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상대적 후생을 측정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적절한 기준이다.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혁신인가를 판단하여 신호를 보내고, 혁신을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서 배급하는 시스템은 부유층의 후생이득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반면, 빈곤층의 후생이득은 불충분하게 반영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십대는 여드름 치료약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 한다. 십대들이 여드름 치료약을 구입하는 비용은 해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100만 여명이 백신을 구입하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전유권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보 생산 및 교환 시스템이 불공정한 이유는 필수적 물품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한 대규모 후생 증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점진적 삶의 개선에 많은 돈을 퍼붓는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후생 증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론들이 제시하는 모든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정의를 개선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소프트웨어, 백과사전, 제품 리뷰처럼 이용자 후생을 개선하는 재화를 떠올려 보자. 그 다음 어떤 정책 선택을 상상해 보자. 그 정책은 비시장 기반의 동료생산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재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소유자가 경쟁자들을 —시장기반 생산과 사회적 생산기반의 생산 모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software interface)에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누군가의 소프트웨어와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진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정부는 취학 연령대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백과사전의 집필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른 출처들에서 정보를 이용할 때에 (단지 그 표현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작권 요건들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인용 과정에서 누락된 자잘한 정보에 상당한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또는 신상품 리뷰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제품들에 대단히 강력한 권리를 설정하여 리뷰어가 제품 평가를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상표권을 넓게 확장하여 리뷰어의 제품 평가를 사람들이 인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제조사의 허가없이 리뷰어가 제품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기타의 자잘한 사항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런 사례들을 든 이유는 이런 식의 정책적 선택들이 얼마든지 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비시장 생산자들에게 — 비영리단체들이나 비공식적 동료생산 기반의 협력 — 실제로 차등적 부담을 부여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정보 자료의 이용을 느슨하게만 통제하는 일련의 법규와 정책들을 '법규 A'(Rule Set A)라고 하고, 정보의 접근과 투입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일련의 법규와 정책들을 '법규 B'(Rule Set B)라고 하자.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B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강화시켜 정보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고안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보생산과 혁신을 침체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지대(rents)를 얻으려는 정보 생산자들의 부가적 유인(added incentive)이 오히려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기 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문이다. 구체적으로는 (a) 지대를 추구하는 정보 생산자들 조차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배타적 권리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대신에 비전유적 시장 모델(서비스 같은) 또는 비시장 모델(비영리단체들이나 개인 작가들) 모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증가된 전유(appropriation)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 그러나 배타권과 규제의 강화가 전체적으로 정보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당히 완화된 가정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전유적 모델에 의존하는 생산자들은 비전유적 영역에서의 생산량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손실된 분량만큼 생산량을 충분히 증대할 것이다.

존 롤스나 브루스 애커먼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하면 법규 A에서 법규 B로의 정책 전환(policy shift)이 어째서 퇴보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법규 A를 따르는 경우를 '상황 A' (State A)라고 하자. 상황 A에서는 다섯 개의 온라인 백과사전들이 제공된다고 가정하자. 그 가운데 하나는 동료생산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법규 B가 통과되었다고 하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상황 B'(State B)가 등장했으며 여전히 다섯 개의 온라인 백과사전들이 존재한다. B가 통과되면서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졌고, 오히려 상업용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편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료 백과사전이 운영을 접었고 뒤이어서 진입한 다섯 번째 백과사전은 남은 네 종류의 상업용 백과사전들과 경쟁을 벌인다. 정책 전환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비추어 보면 칼도-릭스적(Kaldor-Hicks)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 후생으로 귀결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전체 후생은 충분히 증가했으며, 설령 예전보다 생활수준이 악화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상쇄할 만큼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후생 손실을 충분히 보충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두의 후생은 예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더 개선되었다.)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여전히 다섯 개의 백과사전들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백과사전의 정보를 읽으려면 누군든지 어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앞서 상황 B에서 총후생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었지만, 실제로는 최빈곤층이 누리는 후생은 악화되었다. 상황 A에서 최빈곤층은 다른 후생 원천들(sources of welfare)에서 얻을 수 있는 후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백과사전의 정보(만일 백과사전 대신에 소프트웨어 라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 B에서 최빈곤층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즉, 예전처럼 동일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이용하면서 다른 후생 원천에서 감소된 후생을 얻는 옵션, 또는 다른 후생 원천에서 동일한 후생을 얻지만 백과사전은 이용할 수 없는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혁신 경제학(innovation economics) 분야의 연구문헌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와는 정반대로, 정책전환이 상업적 생산자들의 유인과 투자를 체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에서 보면 이런 낙관적 예측 자체만으로 정책 전환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엄밀한 논거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다음 같은 주장이 필요하다: 백과사전들의 질적 수준이 한계적 개선(marginal improvement)에 다다랐으므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장 경쟁이 점차적으로 격화되면서 정보의 이용 가격이 하락하므로 결과적으로 최빈곤층의 후생은 개선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동료생산 방식의 백과사전과 경쟁하던 상업적 생산자들에게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제 최빈곤층도 백과사전의 정보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지만, 정책 전환은 네 개의 상업적 경쟁사들이 존재하던 경우에 비해서 최빈곤층에게 더 개선된 후생을 안겨줄 것이다. 상업적 경쟁사들은 상업용 백과사전 네 개와 무료 백과사전 한 개로 구성된 경쟁적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미 선행적 투자를 진행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애커먼이 주장한 정의론의 관점이야말로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장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론 일 것이다. 애커먼은 시장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거래 틀, 기본 정보, 적당한 교육 여건에 대한 접근(access)을 꼽았다. 반면, 정보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 유틸리티들(basic utilities)은 민감한 가격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본적 유틸리티들은 출생 당시에 우연히 부여된 저마다의 재정적 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발전은 적어도 빈곤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정보이용의 부족(생산 및 저렴한 소비를 위한 시장 기회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부족, 생산적 활동 공간의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이론은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효과를 정의론에 연결시키는 분명한 고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드워킨 이론이 설명하는 관점은 비시장 기반에서 작동하는 정보경제의 기능을 비중있게 다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불운은 빈곤의 부분적 원인에 해당하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은 불운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주어진 불운의 부정적 효과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정보 자원에 대한 액세스의 확대(added access)는 정보 생산자들의 자발적 커뮤니케이션과 생산된 정보를 타인들에게 기꺼이 자유롭게 전달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혜택은 개인들에게 흘러가며 이동한다. 개인들에게 불운이나 무책임 때문에 현재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흐름은 이어진다. 그렇다고 이 흐름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혜택을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주의 정의론(liberal theories of justice)의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은 완전무결한 개선책이다. 혁신 경제학 및 정보생산에 관련된 이론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미 깨달은 지식과 모순되는 제한적 가정만 하지 않는다면, 정보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영역의 창발은 사회의 재분배를 개선한다. 여기에서 정보생산과 교환이란 전유적 배제(proprietary exclusion)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며 사회적 거래 틀에 바탕을 둔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장 기반 및 비시장 기반 행동을 위한 기초적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더 나은 전망을 가지도록 해주고, 자원 분배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력도 완화시킨다. 아울러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시장기반 및 비시장 기반 기업들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정의에 미치는 영향은 9장의 이하 부분에 걸쳐 더 상세히 분석하겠지만, 불평등하게 주어진 애초의 여건(unequal endowment)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야말로 모든 자유주의 정의론들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실무적으로는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특성들 때문에 이제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Internet access)은 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특성들은 정책 수립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을 불러 일으킨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정책들은 특히 혁신 및 경제 성장과 결부되어 있으며, 자유 및 자유주의 정의론과도 관계가 깊다.

### 인류 후생과 개발을 위한 공유재 기반 전략들

오랜 사회 민주주의 전통(social-democratic tradition)은 인간이 사회에서 누리는 실질적 복지에만 초점을 맞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추고, 평등을 위한 이론적 조건들은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 민주주의에서 정의 개념은 시장 경제의 수용을 자유사회(free societies)의 근본적 요소라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이론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의 정의가 강조점을 두는 부분은 기회의 공평이 아니다. 사회적 보험(social insurance)을 제공한 다음에 게으른 사람은 몰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초복지(well-being)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기초복지의 수준을 현저하게 높이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려 노력해 왔고,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기본적 구조도—앞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만 않는다면—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빈곤과 그 감소를 연구한 문헌들은 처음에는 이 특징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장 발전한 시장국가들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국내의 여건과 범지구적 빈곤의 문제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흐려지게 되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든 기본적 인류 복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자의 관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통합되어 하나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가장 분명히 제시하는 학자로서 그의 연구는 정의뿐만이 아니라 자유까지 아우르는 개발의 중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sup>

전 세계 인구가 당면한 산적한 문제들과 국제개발의 중요성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핵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sup>2</sup>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주국가 인도의 전체 인구—미국과 유럽 연합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약간 더 많다—가운데 80%는 하루 2달러 정도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39%는 문맹이며 5세 미만의 아이들의 47%는 저체중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신생아가 4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45%에 달한다. 그렇지만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악의 생활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아니며, 더 심각한 극빈국가들도 많다.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절대적 빈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토론이라도 나누어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범지구적 빈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근본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위키피디아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콩고 인구 49%에게 더 나은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범지구적 차원의 인류 개발을 논의할 때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열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지와 개발의 핵심적 요소들을 생산하기 위한 선진화된 전략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으며, 그 전략들의 대부분에서 정보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sup>1</sup>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빈곤을 부자유의 한 형태로 보았으며 개발을 진정한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개발의 목적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개발의 과정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굶주림, 독재, 사회적 배제, 경제적 기회의 희소성, 공공시설의 부족)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웁킨이)

<sup>2</sup> Numbers are all taken from the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UN Development Programme, 2004).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